

국민의힘 '청년·여성 마케팅'은 빈껍데기

에스프레소



이동수

세태정치연구소 대표

10년 전만 해도 선거에서 청년 표심은 별로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았다. 늘 민주·진보 진영을 찍는 표로 인식됐기 때문이다. 세대보다 수도권·충청 등 지역적 요인이 당락에 큰 영향을 준 것도 사실이다. 이러한 정치 지형이 바뀌기 시작한 건 2010년대 후반, 청년층의 남녀 갈등이 거세지면서다. 2018년을 기점으로 2030 남성들의 민주·진보 진영 이탈이 본격화했다. 더불어민주당으로선 대단히 심각한 문제였다. 선거마다 가져가던 고정표를 잃게 됐기 때문이다.

떠나는 청년 남성들을 붙잡기 위해, 민주당은 2020년 제21대 총선을 앞두고 한 20대 남성을 전격 영입했다. 또래 남성들에게 소구하겠다는 전략이었다. '이대남 마케팅'은 여성은 물론 남성들에게도 호응을 얻지 못했다. 2030 남성들은 오히려 당의 방향성 변화 없이, 20대 남성을 내세우면 자신들이 뽑아줄 거라고 본 알뜰한 술수를 깨닫게 여겼다. 그 반감은 2021년 4·7 재·보궐선거에서 보수 진영 후보에 대한 몰표로 표출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보다 먼저 청년층의 이탈을 경험했다. 그래서인지 이 문

제를 다루는 데 국민의힘보다 앞서가는 경향이 있다. 청년·여성 등 정체성에 기반한 인물 영입이 소용없다는 걸 체득한 것이다. 몇몇 청년 영입 인사들이 구실에 오른 뒤로 민주당에선 인물의 정체성을 부각하는 영입 마케팅이 눈에 띄게 줄었다. 선거 전 구성되는 각종 위원회는 정당인 또는 당과 가까운 거리에 있던 시민사회 활동가들로 꾸려진다. 특정 계파 중심의 폐쇄성을 비판할 수 있겠으나 적어도 운영의 안정성이나 전문성 측면에선 국민의힘보다 나은 점수를 줄 수밖에 없다.

공천관리위원회 구성을 보면 지도부 마음대로 하겠다는 뜻 2030 유권자들, 얼굴이 아니라 정당이 가는 방향을 보고 투표

국민의힘은 지난 19일 6·3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공천을 위한 공천관리위원회(공관위) 구성을 완료했다. 공관위원 8명 중 6명이 여성이고, 5명이 청년(중복)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당내 인사와 외부 인사 비율도 반반으로 맞췄다고 한다. 청년·여성·외부 인사 중심의 위원회 구성은 얼핏 신선해 보인다. 그러나 신선함이 승리를 보장하는 건 아니다. 공관위는 자문 기구 성격의 여타 위원회들과 다르다. 선거에 출마하는 수많은 사람의 공천에 직접적 영향을 행사한다. 그만큼 위원 개개인에게 가해

지는 압박도 굉장할 것이다. 그런 곳에서 정치적 기반이 없는 인물들이 자기 주장을 관철한다는 건 불가능에 가깝다. 결국 청년·여성·외부 인사로 걸러낸 인사 구성은 곧 "지도부 마음대로 하겠다"는 말의 다른 표현인 셈이다.

과거 새누리당 시절 박근혜 비대위가 20대 청년 이준석을 영입해 이미지 쇄신에 성공할 수 있었던 건, 당시 정치 풍토에서 20대 청년을 지도부에 앉힌 파격도 있지만, 박 전 대통령이 당 개혁에 적극적인 의지를 보여준 덕이었다. 김중환·이상돈 등 자당에 비판적이던 인사들을 두루 기용하고 정보 진영의 전유물로 여겨진 복지 담론을 선점하지 않았던가. 이미 정치적·법적 판단이 끝난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에도 하세월이 걸리는 지금의 국민의힘과는 방향 자체가 달랐다.

당 요직에 청년·여성을 기용해 이미지 변화를 꾀하려는 시도는 지난 십수 년 동안 반복됐다. 하지만 유의미한 효과를 거둔 기억은 별로 없다. 흔한 요석행위가 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껍데기에 집착하다 보면 점차 중요한 걸 놓치게 마련이다. 최근 국민의힘 공관위에서 일부 위원들의 '이재명 변호', '이재명 캠프 본부장' 이력이 논란이 되고, 급기야 한 명이 사퇴하게 된 건 그 전형을 보여준다. 현재 국민의힘은 10년 전이나 통틀어 정채성 마케팅을 답습하며 과거에 같은 실수를 했던 민주당 공무리를 쫓고 있다. 그 간격을 좁히기 쉽지 않아 보인다.

우정아의 아트 스토리 [620]

스케이트를 탄 변호사

18세기 영국 신사가 스케이트를 탄다. 빙판 위에서 코트 자락을 날리며 곡선을 그릴 때에도, 양팔은 흔들림 없이 팔짱을 끼고 균형을 유지한다. 검은 모자에 회색 모피를 댄 코트, 은색 버클이 빛나는 구두까지 은근하게 멋을 낸 이 신사는 변호사 윌리엄 그랜트. 이름이 역사에 남은 건 위대한 변론을 남겼다가 아니라 이 그림 한 점의 주인공으로 남았기 때문이다.

그랜트는 미국 화가 길버트 스투어트(Gilbert Stuart: 1755~1828)의 첫 고객이었다. 스투어트는 당시 미국 출신으로 런던 최고의 화가였던 벤저민 웨스트 밑에서 초상화가로 훈련을 받고 있었다. 스투어트에게 초상화를 의뢰한 그랜트는 마침 매우 추운 날 화가를 방문했다. 그랜트는 "이런 날에는 초상화를 그리느니 스케이트를 타는 게 낫겠다"는 말을 건넸다. 사실 그랜트는 스케이트를 그렇게 잘 타지 못했으니 인사치레였을지 모른다. 하지만 스투어트는 스케이트에 진심이었다. 당장 하이드파크로 나간 두 사람. 스투어트는 뛰어난 기술로 주위의 시선을 끌었고, 그랜트는 깨질 것 같은 얼음판에서 서 있다가 스투어트의 코트 자락을 쥐고 바깥

으로 나왔다. 이렇게 한바탕 스케이트를 탄 다음 화가는 우아한 발끝으로 얼음 위에 선 신사의 초상화를 완성했다.

스튜어트는 이 그림으로 단숨에 최고의 초상화가로 등극했다. 미국으로 금의환향해 조지 워싱턴을 시작으로 3대에 걸쳐 미 대통령의 초상화를 그렸다. 하지만 그가 남긴 그림들만 한 전신상은 이것뿐이다. 사실 그는 상반신까지만 잘 그렸고, 전신 구도는 영 서툴렀다. 우아하기 그지없는 그랜트의 모습은 스케이트가 아니었다면 나오기 힘든 자태였던 것. 역시 피겨 스케이트의 품격은 우아함에



길버트 스투어트, 윌리엄 그랜트의 초상, 1782년, 캔버스에 유채, 245.5×147.4cm, 워싱턴 DC, 내셔널 갤러리 소장.

포스텍 교수·서양미술사

社說

中 '반도체 미래 기술' 결국 한국 추월, 남은 시간 별로 없다

과기정통부가 논문·특허 등 양적 지표와 전문가 평가를 종합해 산정한 '50대 국가 전략 기술 평가(2024년 기준)'를 발표했다. 이 평가에서 한국은 미·중·일·EU 등 주요 5그룹 중 최하위였다. 직전 평가인 2022년만 해도 이차전지, 첨단 바이오, 차세대 원자력 분야는 중국에 앞섰거나 같았지만 2년 사이 모두 역전됐다.

독보적이라고 여겼던 반도체마저 관련 전략 기술 5개 중 '첨단 패키징'만 우위를 지켰을 뿐 나머지 4개는 중국에 추월당하거나 격차가 사라졌다. 한국은 현재 세계 최고의 반도체 양산(產量) 기술과 수출 관리 능력이 있다. 지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고공 행진은 여기에 힘입은 것이다. 하지만 양산 기술이 숙련된 '공정의 영역'이라면 산업의 판을 짜고 표준을 설계하는 전략 기술은 산업 주도권을 쥐는 영역이다. 여기서 밀린다는 사실은 차세대 반도체 경쟁에서 중국에 밀릴 것임을 예고하는 것이다.

인간 뇌를 모방한 미래 반도체 칩의 핵심인 '고집적·저항기반 메모리'는 2년 전 평가에선 중국에 앞서 있었지만 이젠 중국과 격차가 사라졌다. AI의 방대한 연산을 처리하는 '고성능 AI 반도체'와 에너지 효율을 좌우하는 '전력 반도체', 자율 주행의 눈에 해당하는 '차세대 센싱'에선 중국이 우리를 앞서 나간 것으로 평가됐다. AI 시대의 두뇌와 심장으로서 동시에 밀리는 것이다. 이미 첨단 메모리 반도체에서는 중국 창신메모리(CXMT)가

LPDDR5 등으로 우리 안방을 위협하고 있다. 낸드플래시에선 중국 YMTC가 한국이 잘하는 '단수 쌓기' 경쟁을 단숨에 뛰어넘는 '본딩(Bonding)' 공법을 들고 나와 판을 뒤집으려 한다.

한국을 추월한 중국은 한국과의 기술 격차를 벌려나가는 단계다. 조사 기준 2년 전 한국과 중국의 50대 전략기술 수준 차이는 48%포인트였으나 이제는 8.8%포인트로 두 배 가까이 벌어졌다. 우리가 높고 있었던 것도 아는데 격차가 더 벌어지고 있다는 것은 지금 수준의 우리 노력으로는 현상 유지도 어려울 것이란 현실을 보여준다.

반도체는 개별 기업의 차원을 넘어 나라의 사활이 걸린 문제다. 중국 화웨이 연구소나 명문 공대를 방문한 사람들은 벌어진 입을 다물지 못한다고 한다. 규모도 방대하지만 핵심은 무섭도록 열심히 일한다는 것이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은 청와대 직원들이 살인적인 근무를 하고 있다며 불가피하다고 언급했다. 청와대만이 아니라 반도체 연구원들도 이렇게 일할 수 있어야 한다. 원하는 사람, 불가피한 사람은 일할 수 있게 해줘야 한다.

반도체특별법 개정을 통해 R&D 인력에 대한 '주 52시간제 예외'를 도입해야 한다. 핵심 인재의 해외 유출을 막기 위한 과격적 보상 체계와 법적 보호 장치도 강화해야 한다. 반도체 공장 신설을 위해서라면 정치권이 앞장서 민원도 해결하고 지원도 해야 한다. 남은 시간이 별로 없는 것이다.

'李 公소취소 모임' 의원 105명, 靑이 자제 시키길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와 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의원 모임'(공소 취소 모임)이 23일 국회에서 출범식을 가졌다. 민주당 의원 105명이 이름을 올린 모임의 출범식에 60여 명이 참석했다. 제1 야당인 국민의힘 의석수인 107명에 육박하는 국회 최대 규모 모임이다. 이들은 "공소 취소와 국정조사는 사법 정의 실현과 헌정 질서 회복을 위한 과제"라고 했다.

이 대통령이 받고 있던 5개 재판은 대통령 임기 시작과 함께 모두 중단됐다.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된 선거법 사건을 제외한 대장동과 백현동, 대북 송금 사건 등은 법적으로 아직 1심이 진행 중이다. 그러나 1심 판결 이전에 검찰이 공소를 취소하면 재판은 종결되고 사건도 그쳤으로 끝난다. 사법부의 공식적 판단을 받기도 전에 집권당 의원들이 집단의 힘으로 검찰을 압박해 재판을 무력화하고 사건을 없애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는 것이다.

민주당은 작년에 법원이 대장동 관련자들에 대한 1심에서 징역형을 내리고 법정 구속하자 대통령 재임 중 형사재판을 중지

하는 '재판중지법'을 추진했고, 이를 '국정안정법'이라고 불렀다. 그러나 이 대통령이 "무리하게 처리하지 말라"는 뜻을 청와대 비서실장을 통해 당 지도부에 전달한 이후 법안은 중단됐다. 당시 청와대는 "대통령을 정쟁의 중심에 끌어들이지 말라. 지금은 국정에 전념할 때"라고 했다. 재판중지법은 대통령 뜻과 무관하게 민주당 지도부가 추진한 정치용 입법이라는 취지였다.

이번 공소취소 모임에는 조국혁신당과의 합당에 반대했던 친이재명 성향 의원들이 다수 참여하고 있다. 이 때문에 공소 취소를 목표로 내거는 한편 정 대표와 맞서기 위한 친명 계파 조직이라는 분석도 있다. 최근 유시민씨는 '공소 취소 의원모임'에 대해 "미친 짓"이라고 비난하고, 친명계가 "유시민이 정상적이지 않다"며 다른 배경이 이것이라고 한다. 대통령에 대한 과잉 충성과 당내 정략이 얽혀 있다는 뜻이다. 청와대가 재판중지법을 중단시킨 것처럼 이 모임도 자제시키면 '국정 전념'의 대통령 진심이 확실해질 것이다.

"헌지 누나" 김남국 興 대변인으로, 제어 장치 아예 없다

민주당이 새 대변인으로 김남국 전 청와대 디지털소통비서관을 임명했다. '헌지 누나' 인사 청탁 논란으로 청와대에서 사실상 경질될 지 두 달여 만이다. 김 전 비서관은 민주당 문진석 의원의 인사 청탁을 받고 "훈식이 형이랑 헌지 누나한테 추천할게요"라고 문자를 보냈다가 언론 카메라에 찍혔다. 청와대는 당시 실제 청탁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김헌지 부속실장에 대해서는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김 전 비서관만 사퇴하는 선에서 사태를 마무리했다.

당시 인사 청탁 대상 자리는 민간 협회 회장직이었다. 기업이 출연했기 때문에 협회와 청와대와 민주당 고위 인사들이 나서서 관여할 권한이 전혀 없는데도 마치 정부 인사하듯이 했다. 직권 남용 혐의 고발이 있었지만 경찰은 이를 묻고도 있다.

그러나 민주당이 불과 두 달여 만에 김 전 비서관을 당 대변인직에 앉혔다. 대변인은 국민 앞에 나서서 당의 입장을 설명하

는 자리다. '헌지 누나' 논란의 기억이 선명하게 남아 있는 사람을 다른 자리도 아니고 대변인으로 임명하는 것을 보면 요즘 민주당은 위협적인 경쟁 상대가 없다 보니 내부 제어 장치 자체가 없어진 것 같다.

김 전 비서관은 정말 많은 논란을 만든 사람이다. 의원 시절 청문회에서 '이모(李某) 교수'를 '이모(姨母)'로 오인해 장관 후보자를 비판했다. 이대원 참사 문제를 논의하는 국회 상임위원회 의장에서 거액의 코인 거래를 하다 적발됐다. 그래서 민주당을 탈당하기도 했는데 당시에도 슬그머니 복당했다.

김 전 비서관이 이렇게 문제를 저지르고도 살아나는 것은 이재명 대통령과 가깝기 때문일 것이다. 그는 원조 친명 그룹인 '7인회' 멤버였고 한다. 김 전 비서관은 6월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출마 후보로도 거론된다고 한다. 민주당 간판만 달면 다 당선된다고 보는 듯하다.

일본 (중도)의 완전 몰락 국민회의 힘, 선명한 반중-친미 깃발 들어라

뉴데일리 newdaily.co.kr

일본의 국회 내 중도 유사부류 대참패 장동혁, 다카이치에게 한 수 배워라 '중도/실용' 운운으로 외연 확장 불가



일본 국민은 다카이치의 선명한 반중친미 노선에 몰표를 던져 지지를 표시했다. 자민당은 역사상 최대의 대패승을 거뒀다. 아사히신문 등 좌파 월드 미디어들이 노골적으로 지원한 (중도)는 대홍수에 쓸려 내려가듯 흔적조차 찾기 힘들 정도로 대패했다. © 챗GPT

친중-반미 몰락, 반중-친미 압승

다카이치의 자민당이 대승했다. NHK는 《역사적 압승》이라고 했다. 전체 465석 중 과반(233석)을 훨씬 넘는 316석을 획득했다. 단일 정당 확보 최대 의석수다. 연립정권에 새로 합류한 일본유신회 36석을 합하면 3분의 2를 넘는 352석이다. 총선 전엔 191석, 과반 이하였다. 총선에서 드러난 일본의 전면 우경화는 * 자민당 압승 * 중도 몰락 * 좌파 패퇴로 요약된다. 《국유》 성격의 참정당까지 3석에서 15석으로 대약진했다. 반면 《좌파/중도》는 역사적 참패를 했다. 제1야당인 입헌 민주당은 공명당과 손잡고 《중도개혁연합》을 구축했으나 달랑 49석을 얻었다. 총선 전엔 167석. 일본 공산당은 8석에서 4석. 또 다른 《중도좌파》 사민당은 단 한 석도 얻지

못했다.

일본 중도(국회 내 중도와 비속)의 완패

다카이치가 《친미》를 분명히 한 것이 결정적 요인 《중도》 운운은 입에도 꺼내지 않았다. 지지층 결속에만 주력했다. 선명한 《반중》도 큰 영향을 미쳤다. 대만을 놓고 중국과 정면 충돌했다. 다카이치의 《반중친미 = 중도-실용 포기》는 국민들에게 먹혀들었다.

선거 당일, 일요일인데도 폭설이 내렸다. 악조건 속에서도 다카이치 지지 유권자들은 적극적으로 투표했다. 젊은 층과 무당층이 뒤를 따랐다.

제1야당 《중도개혁연합》의 한 축인 공명당은 가장 《친중》이다. 입헌민주당도 비슷하다. 일본 유권자들은 《친중》을 거부했다.

집토끼 결집시키니 산토끼까지 몰려들어

다카이치는 총리 취임사에서 "일하고, 일하고, 일하고, 일하고, 일하고, 일하겠습니다"라고 했다. 《일본의 유행어》가 됐다. 이런 《일하는 총리》 이미지를 토대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겠다는 자유우파 경제정책도 호응을 얻었다. 《중도/친중》 성향 이시바 시게루 직전 총리는 취임 직후 선거에서 참패했다. 당시 연립 정당인 공명당과 합쳐도 과반수 달성에 실패했다. 전통적 지지층들이 이반한 것이 결정적 패인이었다. 그랬던 자민당 지지층이 불과 1년 3개월 여만에 폭설에도 아랑곳없이 투표장에 몰린 것이다. 일본은 유권자가 투표용지에 직접 지지 후보와 정당 이

름을 기재하는 《아날로그 투표》를 한다. 걸핏하면 선거가 치러지는 《일원화각제 국가이교 선거관리조직도 한국과 같은 소위 《헌법상 독립기관》이 아니지만, 선거 관리의 공정성을 둘러싼 논란이나 의혹은 전혀 나오지 않는다.

국힘, 언제까지 《중도》 타령?

다카이치의 압승은 트럼프의 대선 압승, 유럽-남미 우파 대약진과 같은 흐름이다. 세계적 흐름과 달리 강성 좌파 더 불어민주당이 정권을 잡고 있는 지금, 국민의힘은 일본 총선의 의미를 읽어야 한다.

국힘은 허망하기 짝이 없는 《중도 타령/중도팔이》를 계속 할 것인가? 장동혁 사퇴를 외치는 부류의 중도 타령처럼 지지층 정서에 반하는 노선을 택하면 어떻게 될까? 상습적 정치 배신자들에게 계속 휘둘리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과 형사 기소에 반대하고 선거 의혹 규명과 선거공정 제고를 촉구하는 국민들로부터 외면 받는다면, 국힘은 어디에서 표를 벌출할 건가?

지난 대선에서 김문수 후보가 41.5%의 만만찮은 득표를 올릴 수 있었던 원동력은 탄핵반대와 선거 공정성 촉구 세력 덕분이었다. 동시에 한동훈 지지자 다수가 김문수를 찍지 않았고, 한동훈 계 당협위원장 중 다수 역시 김문수 선거운동을 하지 않았다는 점은 공공연한 비밀이다.

국힘, 반중친미부터 선명하게 하길

계엄 갈지도 않았던 윤석열의 《6시간짜리 계엄》에 대한 평가와 별개로, 윤석열의 국가적 문제-위기의식에 공감하

는 국민을 외면한다면, 국힘의 앞날은 없다. 2020년 대선 부정 의혹에 대한 트럼프 정부의 본격적인 조사-수사와 맞물리면서 관심이 높아진 한국의 선거 공정성 의혹에 관심을 가진 국민을 내쳐도 마찬가지다.

그런 점에서 국힘 박성훈 수석대변인, 김민수 최고위원, 이인선-윤상현 의원의 발언은 적절하지 못했다. 《전략적 모호성》을 감안하더라도 우파 대통령 연속 탄핵을 안타까워하고 선거 공정성을 중시하는 국민들의 가슴에 상처를 남겼다.

장동혁, 트럼프-다카이치 벤치마킹 해야

장동혁 대표가 당원들과의 약속을 중시하는 입장을 보인 것은 다행이다. 그 어떤 세력들이 흔들려도 《초심》을 결코 잊지 말길 바란다. 《중도타령/중도팔이》에 휘둘러, 대선 후보 김문수 대신 1.5선 의원 장동혁을 선택한 당원들을 배반하는 순간, 장동혁도 김문수의 실패를 밟게 될 것이다. 장동혁과 국힘이 무엇보다 벤치마킹해야 할 것은 트럼프-다카이치 압승이 던지는 교훈이다. 《중도-실용》 내던지고 《반중 친미》 선명히 하라

권순환 객원 칼럼니스트 권순환TV 대표 / 전 동아일보 논설위원



이 기사는 인터넷신문 뉴데일리(newdaily.co.kr) 칼럼으로 2026년 2월 18일 게재 되었습니다.

